

보도시점 배포시

배포 2026. 7. 15.(수) 14:30

기획예산처·중장기전략위원회,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편 방안 논의

-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네거티브 체계 적용 필요
- 규제개편 관련 기업-정부간 소통 확대, 사회 공감대 형성 중요

□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(이하, 위원회)는 '26.7.15.(수) 「제7차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」를 개최하였다.

< 위원회 개요 >

- (기능)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(2012년~)
- (위원) 권오현 위원장(前삼성전자 회장),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
- (분과) ①혁신성장반(AI, 바이오 등 주요산업·경제), ②미래사회전략반(인구, 교육, 노동, 기후 변화 대응 등), ③거버넌스개혁반*(정부혁신, 규제개혁, 균형발전 등) 등 3개

* (거버넌스개혁반, 5명) 차미숙 국토연 선임연구위원(분과장), 고성규 현대차그룹 고문, 문병걸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, 문소영 경제더하기연구소 전문연구위원, 차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

□ 금번 회의에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편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.

- 권오현 위원장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국민 생명·안전 등과 직결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존 규제 체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우선 허용 후 단계적으로 보완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하였으며, 산업장 안전사고 등 관련해서는 법·규제 뿐만 아니라, 전문기업·인력 등 육성이 중요하다고 발언하였다.

- 차경진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이 바로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간 소통채널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.
 - 문소영 경제더하기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환경·안전·노동 등 비경제적 규제 완화 관련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.
 - 참석자들은 법령 조항(건수) 위주가 아닌 법령 단위의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이 체감하는 개선 효과를 높이고,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.
-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과	책임자	과 장	박철건 (044-214-1610)
		담당자	사무관	어우주 (hidwnn@korea.kr)

